

교육부 '내신 대책' 최후통첩...갈등 재연될까

“가이드라인 아니냐” 대학들 즉각 반발

교육부, “수치 내놓지 않겠다”에서 입장 바뀌 행·재정적 제재문제 다시 수면위로 부상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6일 내놓은 '내신 갈등' 대책은 "올해 내신실질비율 비율 30% 이상·올해 입시인 8월말 제출·대학 입시요강 1년전 발표"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지난달 25일 교육부가 내신 갈등 대책으로 제시했던 내용과 비교하면 올해 내신비율 비율을 최소한 30% 이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제외하면 큰 차이는 없다. '올해 내신비율 비율 30% 이상 적용' 요구는 김 부총리가 지난 4일 대교협 회장단과의 조찬 회동에서 합의한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일 대교협 회장단과의 회동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정한다고 합의했고 납득할 만한 수준을 '최소 30%'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내보인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올해 내신비율 비율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는 대학측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수치를 제시할 경우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수치'를 내놓지는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날 대책 발표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내신 반영비율의 최소한도를 30%로 정해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불가' 방침이 갑작스레 바뀌었다는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일부 사립대학들은 특히 올해 내신비율 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올리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학가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김 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의 내신 반영비율의 연차 확대 합의가 나온 직후 대학들은 '정부와 일척적이나마 합의가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데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등 일선 교수들의 움직임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일부 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내신 압박과 같은 사태에 반발해 성명서 발표 등 집단행동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난 4일 내신 반영비율 연차 확대 합의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집단 행동을 자제하려는 조짐을 보여 왔으나 이번 대책 발표가 오히려 교수들을 자극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가 또 한번 강도높은 내신 대책을 제시하게 되면서 대학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학들에 대해 제재를 한다. 안한다 언급하기 어렵다'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최후통첩' 성격의 내신 대책은 정부의 지침을 어길 경우 제재가 불가하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같은 의지는 정부가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올해 내신 반영비율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정하고 나선데서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립뉴스

日 '백서'에 독도 자국영토 표기

정부 유감 표명 시정 촉구

일본이 '2007년 방위백서'에 또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표기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6일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2007년도 방위백서를 오늘 각의에서 통과시키고 이를 일반에 공개했다"고 밝히고 김병기(준장) 국제협력차장이 오후 주한일본 국방무관인 카미노타니 히로시 대령을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한편,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05년과 2006년 방위백서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관련 내용의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7년도 방위백서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술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립뉴스

동계올림픽 재도전 여부

노대통령, 귀국 후 결정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강원도 평창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좌절된 데 대해 "유망이 있는 사람은 패배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싹을 찾는다"며 "더러 패배는 있어도 대한민국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시간 6일 새벽) 과테말라시를 출발, 귀국길에 오르기에 앞서 현지 동포대표들을 격려하기 위한 접견 자리에서 이처럼 새 출발을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동계올림픽 유치 재도전 여부와 관련,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도전할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할 수 없다. 돌아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른 뒤 6일 오전(한국시간 7일 새벽) 서울로 출발,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할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첫 청각장애인 사제 서품

“무안공항 국제선 기능 확충 시급”

지역혁신대회 세미나서 제기

오는 11월 개항예정인 무안공항은 국내선 중심공항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만큼 국제선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하며, 공항의 운영도 지방이 직접 참여하는 혁신적인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원태 한국경제사회연구원장은 6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지역혁신대회 세미나에서 "무안공항은 국내 철도 및 도로, 해운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원장은 철도의 경우 KTX(고속철도) 시스템이 거의 완성되어감으로써, 무안공항

6일 오후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사제 서품식에서 청각언어장애인 박민서(39·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가 정진석 추기경과 '평화의 인사'를 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자가 사제로 서품되는 것은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이며, 아시아 가톨릭교회에서도 처음이다.

연립뉴스

배우권 도시들은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2시간 권에 포함되는 만큼 항공 이용의 기회가 점차 소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역시 장·단거리 유람선 및 쾌속정이 발달하고 운영이 효율화됨으로써, 지리적 특성상 섬과 해안지역을 중요 운항처로 삼아야 할 무안공항의 경쟁상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2010년에는 전국을 종횡으로 연결하는 기간 고속도로망과 지역교통망이 대부분 완성됨으로써 국내선 항공기 이용의 기회가 더욱 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은 이에 따라 무안공항은 지역 내

항공수요나 경험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감안할 경우 국내선 중심공항으로서의 큰 매력을 지니기가 어려운 만큼 오직 국제선 기능을 중심으로 육성해야 하며, 특히 인천공항에 이어 제2의 국제선 전용공항을 목표로 항공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여객·화물의 환승 수요가 확보되어야 하며 ▲국제선 이용을 위한 시간과 경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최소한 주 3회의 국제선 운항 수요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선을 정기노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이왕 뽀뽀! 끝까지 가자

“전남 천혜의 관광자원 개발 적극 지원”

박근혜 호남공약 나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지방순회 간담회 닷새째인 6일 광주와 전주를 방문하며 호남 공약을 내놨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공인 시민회관과 오후 전북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각각 지역선대위 발족식을 겸한 당원간담회를 가졌다.

박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간담회에서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홍어·김치·삼겹살이 어우러져 우리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맛을 내는 '삼합'이 있다"면서 "지역·이념·세대 간 화합이 이뤄지는 삼합정치가 되면 우리 민족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했다.

박 후보는 또 "우리 경제가 살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서해안 시대를 활짝 열어야 한다"면서 "21세기는 과학기술·인재·문화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 광주와 전남은 이 세 가지가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남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곳을 체계적으로 적극 지원, 세계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대구·경북과 인천, 충북, 경기 지역을 방문한 박 전 대표는 11일까지 부산·울산과 대전, 제주 간담회 등 16개 시도 연세 지방당원 간담회를 계속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설

정부, J프로젝트 지원책 마련 서둘러라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컨소시엄이 과도한 토지개발비용 등을 이유로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은 5일 정부가 토지개발사업비 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영암·해남 일대 1천 600만여㎡의 부지에 2만5천여명이 상주하는 기업도시로 만들려던 당초 계획을 바꿔 단순 관광단지로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서다 개발 예정부지 소유자인 농촌공사의 사업 참여 여부, 내국인 면세점 불허 등도 전경련의 투자축소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 사업성이 최우선이다. 전경련 컨소시엄이 J프로젝트 사업규모를 축소키로 한 것에 대해 알기불확할 수는 없다. 전북지역 기업도시 예정지인 무

주도의 경우 기반시설 조성비가 3.3㎡당 12만원인데 비해 영암과 해남의 경우 간척지는 21만원, 해안은 17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사업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참여 등 민간자본 유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반시설비 등 초기투자자가 과도해 수익성이 의문시되면 기업 참여를 기대할 수 없고 J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없다.

J프로젝트는 낙후된 서남권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희생양이 된 전남지역의 활로 모색을 위해선 J프로젝트는 성공해야 한다. 정부는 J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기반 시설비 소규모 한 것에 대해 알기불확할 수는 없다. 전북지역 기업도시 예정지인 무

대학 입시요강 국민 신뢰가 우선이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2008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들에게 최소한 내신을 30% 이상 반영하고 향후 3~4년에 걸쳐 목표치 50%까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을 늦어도 8월 말까지 발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김 부총리의 답화는 교수들의 시위 등 대학의 집단반발에 사실상 백기를 들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방침은 지난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김 부총리는 '요구'나 '해야 한다'는 말 대신 '가급적 희망한다'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과거 교육부의 방침에 비하면 획기적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대학들은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10% 내외에 불과한 현실에서 20%

선까지는 몰라도 30% 이상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구체적인 입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교육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자율성만을 고집해선 내신 갈등을 풀 수가 없다. 교육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대폭 후퇴한 마당에 공교육의 무력화를 더 이상 시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될 수 없다.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8월28일부터 시작된다.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대학들이 교육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밀어붙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내신성적 반영에 문제가 있더라도 갈등을 확산시키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 정부의 방침이 신뢰를 받지 못해서는 국민들만 헛갈리게 된다.

“이명박 12대 국회때 돈봉투 뿌려”

정동영 전 의장 의혹 제기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6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재직 시절 국회 건교위 위원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이해찬 전 총리에 이어 정 전 의장도 이날 작심이라도 한 듯 한나라당 '뒷밭'인 부산에서 이 전 시장을 향해 맹공을 가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부산지역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12대 건교위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라면서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 시절인 12대 국회 때 건설교통위 국회의원들한테 돈봉투를 뿌

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애기해 준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말할 수는 없으며, 애기해 준 사람은 돈봉투를 거절해 구체적 금액은 알 수 없다"며 "이 전 시장은 부적격자로 (대선 후보로서) 곤란하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이 전 시장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위장전입, 땅투기를 밥먹듯이 해 온 낡은 사교의 인물이며 운하를 파자는 것도 결국 (낡은 사교의) '한류'으로 상식을 벗어났다"면서 "(이 전 시장은) 캘리포니아주 검사가 조사한 사기죄 피의자로, 이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LA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연립뉴스

국기에 대한 맹세

35년만에 바뀐다

35년만에 달라진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을 마련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부는 이날부터 13일까지 검토위원회가 제안한 수정문안을 '대한민국 국가법시행령'으로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수정안

현행	수정안
1.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1.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2.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2-1.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3. 용과 마름을 버려	3. 식계
4.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4.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중 '자랑스런'은 어문법과 맞지 않아 '자랑스러운'으로,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는 헌법에 명시된 가치를 반영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각각 수정됐다.

연립뉴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